농부의 아들서 大權까지…63년 풍운의 삶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생

인권변호사·청문회 스타 굽히지 않는 소신·원칙파

23일 63세를 일기로 타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숨길과 희비가 담긴 한편의 '서사시'였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만의 '원칙'과 지역주의에 항거했다가 번번이 좌절한 '소신'을 무기로 최고 권좌에 올랐지만 퇴임 후 짧았던 삶은 불행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초라했다.

인권 변호사로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대통령에 당선돼 재임할 때까지 그는 늘 한국정치의 이단아였다.

호남에 지역기반을 둔 민주당의 영남 출신 대선후보,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 등 그의 정치역정은 그야말로 파격과 기록, 그 자체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46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3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학업에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비상한 두뇌를 지녔지만 가난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일찌감치 접고 부산상고에 진학했다.

수차례의 고배를 마신 끝에 나이 서른에 사법고시에 합격, 판사의 길을 걷다 "적성에 맞지 않아" 7개월 만에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직했다.

잠시 안락한 삶을 살던 그가 인권 변호사의 가시밭길로 접어든 것은 1981년 부림사건 변론이 계기가 됐다. 이후 소외받는 노동자와 학생들의 편에 서서 군사정권에 저항했던 노 전 대통령은 87년 9월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건을 통해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렸다.

당시 사인 규명에 나섰다가 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지만 돈키호테 같은 용기를 눈여겨본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 측의 권유로 88년 13대 총선에 출마, 5공 실세였던 허삼수 후보를 꺾고 제도권 정치에 입문했다.

초선의원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신데렐라처럼 부상, 한국정치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게 한 무대는 88년 5공 청문회였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힘있는 증인들을 정연한 논리와 송곳 질문으로 몰아세워 TV를 시청하던 국민을 열광시키면서 '청문회 스타'가 된 것.

그러나 이후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순탄치 못했다. 1990년 1월 3당 합당 때 김영삼 총재의 손을 뿌리치고 합류를 거부한 뒤 지역주의의 벽에 막혀 낙선을 거듭하는 등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98년 보선에서 '김대중 깃발' 아래 종로에 도전, 금배지를 달았지만 2000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내세워 고향 부산에 내려갔다가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에게 고배를 들었다. 하지만 이 선거는 '대통령 노무현'을 있게 한 소중한 패배였다.

이후 한국 정치권에 불어닥친 '노풍'의 진원은 호남이었다.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고, 이는 '이인제 대세론'을 함몰시키면서 전라도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경상도 출신 후보로 나서는 발판으로 작용했다.

그는 대선날 새벽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가 후보단일화를 철회했지만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정면돌파를 택했고, 정치 인생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그 특유의 승부수는 청와대 입성의 '기적'을 이뤄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호외 발행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전하는 광주일보 호외를 읽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 실

盧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애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 뒷산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쉽게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로 너무 참담하고 애석하다. 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참여정부의 탄생에 주춧돌을 놓았던 광주·전남 지역민의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명복(冥福)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통해 가중돼 온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동안 고인이 '인간 노무현'으로서 느꼈을 비애와 고통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특히 원칙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항상 소수의 편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길만을 골라 다닌 고인의 인생 역정을 돌아볼 때 가족, 친척, 측근이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겪었을 고뇌와 심적 부담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고인이 유서에 남긴 "너무 힘들었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고인은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운영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고 국민을 실망시킨 적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병폐인 지역주의 타파 등 새로운 정치질서 모색을 비롯해 지역 균형발전, 남북 화해 추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력 등은 시대정신에 부합된 의미 있고 값진 시도들이었다. 또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보여주지 못했던 탈권위주의적 모습 등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에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역사적 비극의 단편을 본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행보가 한결같이 불행한 결말로 이어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까지 발생한 데는 개인적 과오도 물론 있지만 정치와 이념의 제물이 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는 한국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박함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어리석은 정치보복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보복이 사라지려면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신과 그 주변에 서있는 이들이 스스로 몸가짐을 바로해야 한다. 국민도 선거를 통해 뽑은 정치지도자를 존중하고 함부로 매도하는 언행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다. 죄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다. 하지만 수사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수사 과정을 중계방송하듯 떠벌려온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비극이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되며 국론 분열로 이어져서는 더 더욱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해석과 평가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애도와 함께 우리 모두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때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절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픔과 아픔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부는 장례절차 등에 대해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

脫 권력·권위 … 정치개혁 뚜렷한 족적 남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

한국 정치의 '이단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아마추어 정부'라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 정치개혁 부문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탈(脫)권력, 탈(脫)권위를 위한 '고집스런' 국정 운영은 그의 최고의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는데도 검찰·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과 거리를 뒀다. 과거 정권의 시녀역할을 했던 국가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형식적인 민주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통제력마저 상실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또 당정분리로 당과 국회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3권 분립은 물론 당과 국회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정치와 정당정치 실종이라는 부작용도 있었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도 탈권력을 표방했다. 과거 향유 됐던 특권의식의 해체와 개방에 따른 평등을 추구한 것이다.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5년 내내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신문 가판 구독금지, 개방형 브리핑제도, 신문법 제정, 신문유통원 설립 등 개혁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과의 싸움을 계속하며 기득권 언론과의 타협을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화두로 던졌다. 행정복합도시를 조성, 정부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이는 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으나 노 전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북핵 6자회담 진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상징되는 대북정책이 외교정책과 손발이 맞지 않아 한·미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일본·중국 등 다른 4강과도 적지 않은 마찰을 빚는 등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평가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미관계에서 드러난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 '동북아균형자론'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 전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후한 편이 아니다. 엘리트주의에 맞서 교육평등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떨어뜨리면서 학력저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계층이동을 지향점으로 내세운 교육 평등주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전면 궤도 수정되는 처지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분배위주의 경제 정책을 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1인당 국민소득은 2003년 1만 2천826달러에서 지난 2007년 2만81달러로 5년 사이 57% 늘었다. 하지만, 실질소득의 증가보다 원·달러 환율이 같은 기간 1천200원에서 930원으로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3일 오전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대별 모습. 위에서부터 어린시절, 변호사 시절, 국회의원 시절의 민주화 투쟁, 5공 비리조사 특위 청문회 활동, 2002년 대선 민주당 후보시절 유세, 16대 대통령 취임식, 국회 탄핵소추 가결 때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재임시절 부산 APEC 정상회담, 2007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농사 짓는 모습, 지난 4월30일 검찰 출두. /연합뉴스

"내 몸의 반이 무너진것 같은 심정"

김대중 전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서거 소식에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이라며 침통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김 전 대통령 측 최경환 비서관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이 같이 말하며 "평생 민주화 동지를 잃었고 민주정권 10년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온 가족에 대해 매일 같이 혐의가 언론에 흘러나와 그 긴장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다"며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악·비통" "국가적 불행"

박광태시장·박준영지사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는 23일 "박 시장이 이날 2015 하계U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FISU 총회를 앞두고 프레스센터에 들러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을 새벽에 접한 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통해 했다"고 전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3일 밤 11시50분께 봉하마을을 찾아 빈소를 방문하고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박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200만 도민은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애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